

##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정책연구과제명	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		
과제 담당관	소속(직급)	사법정책연구원(판사)	성 명 오세용
연구자	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(책임연구원 : 전원열)		
연구기간	2016. 12. 19. ~ 2017. 7. 18. (7개월)		
연구금액	45,00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		
계약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수의계약		
연구결과	○ 주요 외국에서의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 제도(독일, 프랑스, 일본, 미국 등)의 연혁, 현황 소개 ○ 한국에서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 관련 발생하는 이론상·실무상 문제점 소개, 문제점 발생원인 및 그동안의 개선노력 소개 ○ 실체법 뿐 아니라 소송법, 집행법을 아우르는 큰 시각에서 종합적인 입법론적 개선방안 제시		
<b>평가항목</b>	상	중	하
연구목적과의 부합성	○		
내용의 완결성	○		
구성, 체제의 적정성	○		
참고문헌의 충실도	○		
학술적, 실무적 가치	○		
제출기간 준수	○		
용역수행자의 성실성	○		
연구결과 활용가능성	○		
평가 결과 총평	별지와 같음		
공개 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공개 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공개		
비공개 사유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<input type="checkbox"/> 1호 <input type="checkbox"/> 2호 <input type="checkbox"/> 3호 <input type="checkbox"/> 4호 <input type="checkbox"/> 5호 <input type="checkbox"/> 6호 <input type="checkbox"/> 7호 <input type="checkbox"/> 8호		
2017. 8. 28.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			

## 평가결과 총평

### ◎ 주요 외국에서의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 제도

#### 1. 독일의 제도

##### ■ 입법 현황

- 채권자취소권 : 채권자취소법
- 부인권 : 도산법

##### ■ 특징

-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: 강제집행수인의 소,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권원 필요
- 채권자취소권의 본질 및 효과 : 채권설(채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채권적인 효과 발생), 취소되어도 채무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필요 없음, 승소한 취소채권자는 소유명의가 수익자인 상태로 압류 등 집행절차 진행 가능

#### 2. 프랑스의 제도

##### ■ 입법 현황

- 채권자취소권 : 민법(채권법), 2016년 개정(조문위치 변경 등)
- 부인권 : 상법 제6권 제3편 회생절차 부분

##### ■ 특징

-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: 소제기에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요구되지 않으나, 향후 일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필요함
-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: 취소채권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만 효력 있고(대항불가성 선언), 취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 미치지 않음, 승소한 취소채권자는 소유명의가 수익자인 상태로 압류 등 집행절차 진행 가능
- 부인권 행사의 효과 : 모든 일반채권자에 미침

#### 3. 일본의 제도

##### ■ 입법 현황

- 채권자취소권 : 민법, 2017년 개정(병합설의 명문화, 절대적 효력설 및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 의무 명문화 등)

- 부인권 : 회사갱생법, 파산법, 민사재생법

##### ■ 특징 (한국의 법리와 유사)

-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: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의 결합(병합설)

-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: 원상회복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데, 취소채권자의 상계가 허용되며, 취소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효력 발생한다는 민법 규정 있음

#### 4. 미국의 제도

##### ■ 입법 현황

- 채권자취소권 : 통일 사해행위취소법(UVTA), 형평법상의 채권자소송 및 보충절차
- 부인권 : 연방파산법

##### ■ 특징

- 사해행위 취소방법 : 소 제기
-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: 부동산 소유명의를 여전히 수익자에게 남아 있고, 취소채권자는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이전행위가 없던 것으로 보아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이전재산에 대한 집행 실시(상대적 효력), 위 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 승소판결 필요

#### ◎ 한국에서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 관련 실무상 문제점

- 사해행위취소의 인정범위 확대에 인한 부작용
-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의 관계 및 수계 문제
-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와 책임재산의 집행방법(상대적 효력설과 민법 제407조)
- 가액배상 및 사실상 우선변제로 인한 부작용
-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

#### ◎ 입법론적 개선방안

##### ■ 접근 방법

- 민법 뿐 아니라 소송법과 집행법에 모든 영역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

##### ■ 상대적 효력설과 민법 제407조의 문제 해결 방법

- 우리 민법 제407조의 입법 연혁 고찰(브와소나드 초안 + 일본 민법)
- 독일·프랑스·미국의 방향 : 상대적 효력설 + 수익자 명의로 두고 일출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+ 우리 민법 제407조 삭제
- 일본의 방향 : 절대적 효력설(소송고지) +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 + 우리 민법 제407조(일본 민법 제425조) 존치

##### ■ 사해행위취소의 인정범위 확대 방지 노력

- 사해성의 인식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변경(수익자·전득자 → 취소채권자)

■ 부인권 소송과의 정합성 제고

- 용어, 판결주문, 행사방식, 대상행위 등에 있어 정합성 제고 노력 필요하나, 일정한 한계가 있음

■ 가액배상에 따른 우선변제의 부작용(2위의 승리)

- 독일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, 가액배상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임

■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 주체 문제

- 개인회생절차와 부인권 행사 간의 입법취지상의 충돌

- 종래의 실무 관련 고민 필요(개인회생에서 적극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?)

◎ 총평

■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(독일, 프랑스, 일본, 미국 등)의 연혁, 변천, 실무현황 및 최신 동향을 잘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음

■ 사해행위취소제도 관련 실무상 문제점에 관하여 해결책을 제시함에 있어 실체법 뿐 아니라 소송법과 집행법적 관점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, 한국의 관련 입법 연혁과 함께 외국의 입법례, 실무운영 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■ 향후 민법, 채무자회생법 등의 개정안 마련시 중요한 근거자료 내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